

이 학부모, 어느 정도였길래... “교감 정신과 치료” 경찰 고발

서울시교육청, 교권침해 학부모 성동경찰서에 고발 명예훼손·무고·업무방해 등 혐의...반년간 학교 공격 교장·교감 “아동학대 혐의” 신고...교감 정신과 치료 자녀 문제와 무관한 자료 300건 요구해 교육 마비돼

자녀의 초등학교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된 이후 교장·교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관련 없는 자료를 무더기로 요구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된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됐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성동구 모 초등학교에서 고발을 요청한 학부모 A씨를 이날 성동경찰서에 명예훼손·무고·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의 자녀는 지난 2월 4학년 재학 당시 전교 부회장에서 당선됐으나 선거규칙 및 유의사항을 어겼다는 이의제기에 따라 당선 이 취소됐다. 포스터 규격, 유세시간, 방송토론 약속 위반 등이 이유로 전해졌다.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 8월까지 반년 가량 여러 방식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교장·교감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는 등 총 7건의 고소·고발과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A씨가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고소·고발한 건 중) 검찰에 송치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과를 받은 게 꽤 되고, 경찰 차원에서 불송치 결정된 사안도 있다”며 “(A씨가) 교장과 교감에 대해 고소·고발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무고를 저지른 소지가 있는 사안도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맘카페에 교장·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학교를 겨냥한 민원을 넣고 자료를 무더기로 요구해 업무를 방해(공무집행방해죄)한 혐의도 포함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A씨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9회에 걸쳐 총 300건의 자료를 학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민원을 국민신문고로 내기도 했다고 한다. A씨가 요구한 자료는 아이의 전교 부회장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교의 인사 기록, 예산과 카드 사용 내역, 사업 내역 등이다. 이에 학교의 모든 영역에서 문서를 만들어야 하므로 사실상 운영이 마비됐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교로 하여금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고 학교의 행정 기능도 마비시킬 정도였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교감이 고초에 시달리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까지 받

았다고 전했다. 5학년이 된 A씨 자녀는 지난 8월 전학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견디다 못한 학교 측은 지난 8월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의결하고 시교육청에서 A씨를 고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같은 달 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 고발을 결정했다. 이후 서류 검토와 준비,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날 A씨를 고발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책을 꾸준히 보완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초매식 앞두고 꺾갓 손질 28일 경남 함양군 서하면 황산마을에서 장충명씨 부부가 초매식에 선보일 꺾갓을 손질하고 있다. 지리산 함양꺾갓은 내달 7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꺾갓매장에서 초매식을 갖고 본격 출하된다.

‘尹 명예훼손 혐의’ 기자 검찰 출석 “조작수사”

“검찰이 증거 제시 못하면 진술 거부권 행사할 것”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허재현 리포터 기자가 검찰에 출석하며 “이번 수사는 명백히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다. 허 기사는 28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허 기사는 “저는 이 사건 피의자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 당사자이기도 하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이 사건이 조작된 수사라는 걸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라며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입증해나갈 자신이 있고 확인되는 대로 다 보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써있는 내용과 관련해 어떤 증거와 증언 등이 있는지 사실 확인을 거쳐겠다”면서 “만약 (검찰이) 그것들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조작 수사한 정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허 기사는 또 고형곤 중앙지검 4차장과 익명의 검사들을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지난주 공수처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허 기사는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저와 관련해 허위 사실에 가까운 내용을 퍼뜨려서 명예훼손을 했다”며 “제가 수사에 비협조적이어서 소환을 서두른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검찰과 사전에 협의된 일정에 꼬박꼬박 출석해 포렌식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어떻게든 이 사건이 부의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려는 의도였고 거기에 고형곤 4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허재현 리포터 기자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사에 앞서 입장 및 검찰 추가 고소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차장이 총대를 멘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기사는 자신의 혐의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전날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했다. 허 기사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하며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이 녹취록이 조작된 것이며, 허 기사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공모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김수원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